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2, 3, 16면

윤석열의
극우화
4면

반윤석열
민중전선 전략
6면

급진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모순된 태도
12면

보수파의
반낙태 운동
15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 항의 시위대

“카멜라 해리스는 전쟁 범죄자다”

관련 기사 3면



중동 학살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한다

8월 25일 일요일 이른 시각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여러 차례 집중 폭격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수천만 명을 집어삼킬 더 광범한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후 저항 세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첫 단계”로서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 기지·병영 11곳에 카티사 다연장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7월 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최고 군사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한 후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던 차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슈크르를 살해한 지 몇 시간 후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했다.

8월 25일 일요일에 헤즈볼라는, 민간인 피해가 있을 시 “시온주의자들의 도발·공격 행위에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응징은 매우 고통스럽고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헤즈볼라의 발표가 있는 후 레바논 남부 카시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중상을 입고 키암 지역에서 폭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의 NNA 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확대하려 애써 왔다. 이스라엘의 슈크르·하니예 암살은 중동 전역에서 재앙적 유혈 사



미국은 확전 위험에도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레바논 남부 키암 마을의 연료 탱크를 폭격한 이스라엘군

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열어젖힌 도발 행위였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계산은, 그런 전란의 불씨를 땀기면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를 훨씬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7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학살 동맹을 촉구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미국의 적입니다.

“우리의 전투가 미국의 전투고, 우리의 승리가 미국의 승리입니다.” 환호하는 의원들에게 네타냐후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품목 중에는 F-15 전투기 50대 이상, 첨단 공대공 미사일, 탱크 포탄, 박격포용 고폭탄, 전술 차량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가자지구를 더 파괴하는 데에 그런 첨단 무기는 필요치 않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앞서 공급한 다종다양한 무기로 이미 가자지구를 초토화했고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을 살해했다.

학살 동맹

하마스에게는 이스라엘이 최근 받기로 한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할 공군이 없다. 이스라엘에 인계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이번 무기 지원은 이스라엘이 서방의 중동 경비전으로서 얼마나 큰 신임을 얻고 있는지를 보여 준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對)러시아 대리전과 중국 제국주의를 상대로 점증하는 긴장이라는 다른 두 전선으로 이미 분투 중이다. 그리고 미국은,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된다면 이란이 만만치 않은 적수일 수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미국은 군사 행동 확대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말리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해 왔다. 8월 25일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표현은 인종 학살 지원의 역겨운 코드명이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와의 대답에서 “이란과 이란의 역내 파트너

및 대리 세력의 공격 일체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 팻 맥패든은 8월 25일에 “모든 당사자들이 수위를 더 높이지 말고 대규모 중동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동 지역에 닥친 실질적 위험이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를 지지하며 계속 무기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말은 공문구이자 용납될 수 없는 위선에 불과하다.

8월 25일 공격은 이집트에서, 휴전을 위한다는 대화 테이블이 재개된 시점에 벌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휴전이 선언되면 전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25일 늦은 시각에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탈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에서의 공격 행위를 멈추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회를 줬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고 미국이 그를 돕기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 모든 것은 시간 낭비였다. 그래서 더는 [공격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

이번 토요일 시위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중동에서의 확전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Fresh Israeli airstrikes on Lebanon threaten slaughter in Middle East' (2024. 8. 25) / 번역 김준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5



8월 22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의 항의 행진

(사진출처: peopledsworld.com)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 앞 항의 시위대: “카멀라 해리스는 전쟁 범죄자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8월 19일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 수천 명이 대회 장소로 행진했다. 시위는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시위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여러 투쟁을 단결시키자,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 전범 민주당에 일말의 기대도 없다, 해리스를 지지하지 말라.

연설자들은 민주당이 10개월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지원한 인종 학살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시위대는 가자 전쟁 휴전,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인종학살자 바이든, 살인자 해리스(Genocide Joe, Killer Kamala)”,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을 겨냥한 “영아 살해범 블링컨(Baby-killer Blinken)” 구호를 외쳤다.

전쟁 반대 운동 단체, 국가와 경찰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 이민법 반대 운동 단체, 노동운동 지원 단체, 임신중지권 방어 단체, 성소수자 권리 운동 단체 등 270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노동자·무슬림들이 이날 시위를 위해 힘을 모았다.

시위를 주최한 연대체 ‘민주당 전당대회 항의 행진’의 공동 의장이자 미국 팔레스타인커뮤니티네트워크(USPCN) 시카고 지부 활동가인 나제크 산카리가 집회에서 연설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우리는 미국이 인종차별적 정착자 식민 국가 이

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일체 중단하라고 요구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라!

“우리는 대회장이 지척인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가를 상대로 기나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열리는 전당대회는 조금치도 환영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저 대회는 인종 학살과 전쟁을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 행진하고 소리칠 것입니다.”

시카고교사노동조합(CTU) 활동가 코비 길로리는 이렇게 연설했다. “바이든, 해리스, 블링컨은 전범입니다.

“저들이 주택, 의료, 교육 재정을 확충했습니까? 흑인 살해를 멈췄나요? 우익의 공격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끔찍한 범죄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저들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복무합니다. 전범들은 자기가 폭탄을 갖고 있어서 힘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지금 이곳에서 행진하는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USPCN 활동가 네스린 하산은 이렇게 연설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포탄과 총탄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이스라엘이 학살을 저지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총을 쏘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총알을 대는 것은 미국입니다.”

월요일 시위 참가자 몇 명은 철책을 넘어 전당대회장에 진입하려 했다. 경찰은 네 명을 체포했다. 시위대는 현수막, 쿠파야,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행진했다.

전당대회장 안에서는 몇 명이 바이든의 연설 도중 “이스라엘 무기 제공 중

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그 사람들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은 조명이 어두워지자 바이든 지지 팻말로 무슬림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사벨 링로즈

출처 Isabel Ringrose, ‘Kamala Harris is no friend of freedom or of Palestine – Marchers denounce Democrats’ (2024. 8. 20) / 번역 김준호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경기/인천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신도림역 2층 가온 대회의실 (신도림역 1호선 지상층 개찰구 앞 4~6번 출구 방향)

발제 김준호 (노동자연대) 국제 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인천 지역 모임들 문의 010-6224-2157 / kyongi@ws.or.kr

서울 서부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공저자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윤석열의 극우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일시 9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홍산단 3층 강당 (해와역 1,2번 출구 사이)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최근 한국 현대사》공저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UFS 연습 중인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을 찾은 윤석열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보수 인사인데도 말이다.

윤석열의 군국주의적 행보도 분명하다. 그는 여름 휴가 동안 군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언론에 얼굴을 들이밀 때마다 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이젠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

려고 한다.

8월 21일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 중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침략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며 훈련을 독려했다. UFS는 유사시 북한 선제 공격과 점령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윤석열은 국민연금 개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고작 3.2퍼센트 늘어난 긴축 예산이다.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문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자살 특공대"라고 부른 전력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파업

진압 경찰에 대한 포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문수가 전광훈과 함께 만든 극우 조직 자유통일당은 최근 윤석열 방어 대규모 거리 집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전광훈은 10월 3일 최대 결집을 우익에 호소했다.

윤석열이 이런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한국노총 우파 관료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짜) 연대를 훼방 놓고, 더 나아가 한국노총을 분열시키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강경 태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문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문수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그 시각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전은 반정부 집회를 하려면 경찰에 비

용을 내고 하라는 황당한 우익적 발언을 했다. 민주적 기본권을 돈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당대표 당선 후 인선에서 뉴라이트 원조 격인 신지호에게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요직을 맡겼다.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척하지만, 역시 초록은 동색인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극우 본색이 국가기구의 전면적 우경화를 뜻하진 않는다. 그러기에는 아직 대중 저항이 건재하다.

26일에는 법원이 정부의 MBC 장악 시도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로 경영진 임면권을 갖고 있다.

건국절 논쟁의 의미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제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느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언 발표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기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을 건국절 위상의 기념일로 삼았다. 둘 다 자신들이 세계사적 부르주아 혁명을 주도한 것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건국절 논쟁이 역사 실증 논쟁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세력들 간의 정



뉴라이트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영터리 역사로,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

대한민국 건국 76주년

당성(정통성)을 둘러싼 정치 투쟁이라는 뜻이다.

뉴라이트의 이론적 지주로 꼽히는 안병직 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조선일보>와의 인터

뷰(8월 26일치)에서 뉴라이트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즉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이 한국의 자

립과 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논증하는데 목표를 두게 된다. 한미 동맹의 주역인 이승만과 고도성장을 이끈 박정희를 연구하고 재평가하는 건 당연하다."

안병직은 5년 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친미와 친일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다.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들이 뉴라이트를 표방하며 등장한 2000년대 중반이나, <반일종족주의>를 출판하며 재결집을 모색한 시기는 모두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가 전개되던 때였다.

뉴라이트 중용과 건국절 논쟁은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성(정통성) 위기에 처한 한국 지배계급이 취하는 이데올로기적 타개책의 일부인 것이다.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그의 가족들은 외부 병원에서의 진료가 시급한데 청주교도소 측이 박응용 씨의 병세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응용 씨의 아들 박인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다카야수 동맥염은 아직 치료법도 없는 희귀 난치병이에요. 언제 어디 혈관이 막힐지 알 수 없어요. 주치의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뇌 속 혈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래요.”

그럼에도 청주교도소 당국은 6개월 동안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월에 청주 하나병원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줬어요. 일주일간 입원해 뇌혈관 검사, 심장혈관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 소견서를 교도소에 바로 냈죠.

“이후 아무 조치가 없어서 나중에 교도소 측에 물어 보니, ‘소견서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병원 검사와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장 나가야 할 만큼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8월 8일 변호인인 정병욱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응용 씨는 자신의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일주일 정도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다. 자주 쓰러지고 부딪히고 있다. 외진을 한 번도 못 나가고 있다.”

그날 결국 박응용 씨는 쓰러졌고, 그 다음 날에야 청주 하나병원에 갔다 올 수 있었다.

그때 병원 주치의가 바로 입원을 권했다고 박인해 씨는 전했다. 교도소 측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10월 중순에야 입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위중하고 검사와 치료가 시급한데, 10월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늦어요.”

8월 21일 박응용 씨를 접견하고 온 한 지인은 이렇게 전했다. “전에도 제가 보는 앞에서 접견실 문에 부딪힐 만

큼 건강이 나빠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견할 때 보니까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말을 더듬으며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주교도소 의료과의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박응용 씨 외부 진료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들은 박응용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져도 이를 제때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가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등 그간 청주교도소가 보인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교도소 당국이 10월까지 미루지 말고, 박응용 씨를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시켜 주기를 바란다. 또한 주기적인 외부 병원 진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 활동가들이 범죄단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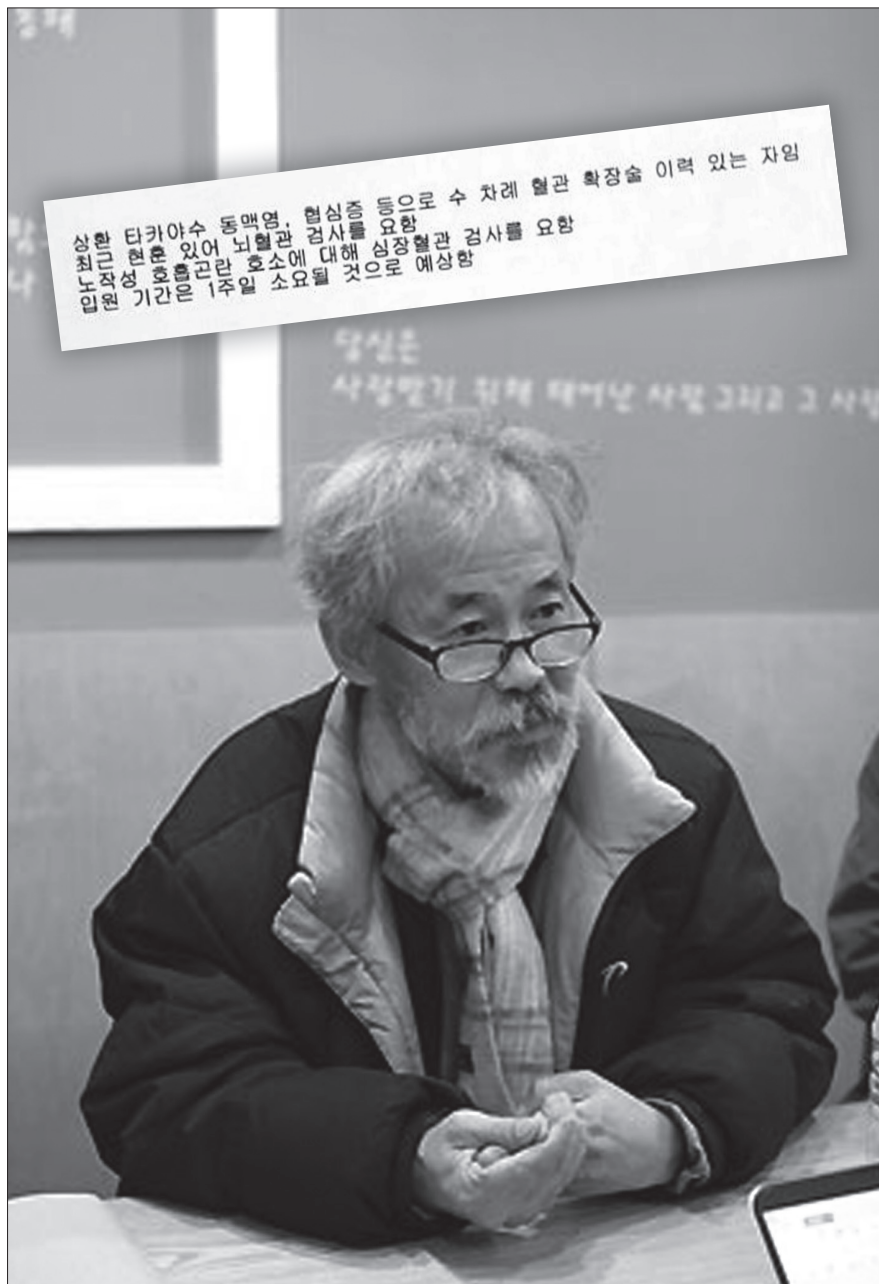
한편, 앞서 2월에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도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그 어떤 폭력을 저지른 적도 없는, 대중적 방식의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의 조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적용돼 온 것이다. 검찰은 이를 보안법 사건에 적용해 청주 활동가들을 ‘친북 이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자들’로 선전하며 사상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했다. 그리고 청주 사건을 본보기 삼아, 다른 보안법 사건의 형량도 높이고 싶은 듯하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이런 마녀사냥 의도에 부응했던 것이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승실 씨는 3인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을 받아 왔다(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거기서도 지난 7월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박씨의 이의 제기에도 재판부는 아무런 심리 없이 이를 허가했다.

박승실 씨는 이런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피 신청 당한 제11형사부에 그대로 배당해 버렸다.

김영익



박응용 씨와 그에 관한 의사 소견서 일부. 그럼에도 교도소 측은 나 몰라라 한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2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원내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 탄핵 운동 조직을 꾸리겠다고 한다. 전통적인 스탈린주의 민중전선 전략의 상층 통일전선과 하층 통일전선을 구현하려 하는 듯하다.(이것은 촛불행동 측의 투트랙 전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진보당의 윤석열 탄핵 추진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민·빈민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윤석열 탄핵 요구를 중심으로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원내외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이층(공중전과 지상전) 구상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 주도의 운동은 윤석열 탄핵 국회 공조를 뒷받침하고, 진보당은 주되게는 원내 공조를 추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적극 건설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상/하층 또는 공중/지상 투트랙 전략은 반윤석열 투쟁이 전 계급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부과할 것이다.

국회 탄핵은 민주당(175석)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국회 내 세력관계 때문에 국회 탄핵 추진 여부는 민주당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설령 거리의 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국회가 그 압력에 밀려 탄핵소추를 해도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구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박근혜 퇴진 절차가 그랬다.)

특히, 처음부터 국회 탄핵에 목표를 한정하는 것은 — 1단계 ‘민주변혁’이라는 용어로 돼 있겠지만 — 대중 항쟁으로 즉각 윤석열을 물러나게 만들고 국가기구에 타격을 주는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과는 달리 투쟁의 잠재력을 제한한다.

이처럼 처음부터 탄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과도 다르다. 즉, 시작부터 민주당



윤석열 탄핵 집회

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다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의 정치적 지향은 민주당과 동맹해 우익 정부를 합법적으로 하차시킨 뒤 민주당과의 연립 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해 사회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선은 사실 박근혜 퇴진 운동 과정과 문재인 정부하에서 정의당이 취했던 전략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문재인의 민주당에 대해 정의당이 취했던 접근법을 이번에는 진보당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해 보겠다는 것이다.

당시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일부가 박근혜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동참하도록 하려고 박근혜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었던 철도 파업을 종료시키는 데에 앞장섰다.

1930년대 프랑스 민중전선의 경험

민중전선은 파시즘이나 극우에 맞서기 위해 좌파가 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선거 연합을 통해 공동 집권을 하려는 전략이다.

민중전선은 광범한 대중에게 극우에 맞선 유력한 선택지를 선거에서 제공해 사람들을 극우에 맞서 단결시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연합은 안정적일 수 없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계급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극우 득표를 극대화하려면 극단적 입장을 자제하고 중간층 표를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는 선거 공학적 논리가 우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중전선의 강령에서는 좌파가 자유주의적 중도파에게 양보를 하고, 자유주의적 중도파에 대한 좌파의 비판도 억제된다.

이는 사실 자본가들이 민중전선의 집권을 용인하게 하도록 좌파와 노동운동이 급진적 강령과 투쟁을 자제하고 포기하라는 압력이다.

장석준 씨 같은 개혁주의적 좌파가 역사적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 1930년대 중엽 프랑스 민중전선은 파시스트들이 독일 히틀러의 집권에 고무돼 준동하자 공산당과 사회당이 자유주의적·친자본주의 정당인 급진당과 연합해 집권에 성공했다.

당시에 급진당은 집권당이었고 대불황기에 긴축 정책을 펴서 노동계급 대중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금융 부패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따른 생활의 고통과 절망, 환멸이 파시즘 급성장의 토양이 됐다.

파시스트들의 성장에 자양분을 제공한 급진당과 연합하려고 공산당과 사회당은 자본주의 반대와 그밖의 급진적 연사를 거둬들인 것은 물론이고, 급진적 재분배도 민중전선 강령에서 뺐다. 게다가 공산당은 애국주의 연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프랑스 민중전선이 집권한 1936년 총선에서 극우 연합과 민중전선의 의석 차이는 100석 넘게 났다. 하지만 총 득표수 차이는 불과 1.4퍼센트였다. 급진당의 득표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민중전선의 집권은 그 직전 2년 동안 반파시즘 투쟁에 적극 나섰던 노동자들을 고무했지만, 극우파의 세력이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중전선은 (공산당의 결정적 도움으로)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던 1936년 6월 총파업과 공장 점거를 반대하고 자제시켰다. 극우에 맞설 매우 효과적인 투쟁 수단을 억누른 것이다.

민중전선에 내포된 계급 협력주의의 논리는 좌파와 노동운동에 불리하다. 계급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 노동계급의 의식을 흐리고 파업 같은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 방식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그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의식이 후퇴하면, 세력 균형은 지배계급과 우익에 유리해지고, 이는 민중전선 내의 자유주의적·친자본주의적 인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프랑스 민중전선은 2년 만에 끝장났다. 공산당은 불법화됐고, 사회당은 분

열했다. 급기야 의회는 나치 독일의 침략을 받자 친나치 장군인 페탕에게 정권을 넘겼다. 민중전선이 승리한 바로 그 총선 결과로 구성된 의회가 벌인 일이었다.

전략적 야권연대

한국에서 민중전선이 집권에 성공한 적은 아직 없지만, 민중전선 전략은 쓸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때의 야권연대, 박근혜 퇴진 운동 때의 탄핵 공조, 문재인 정부하 개혁 공조 노선은 일시적 성공을 거두는 듯했지만, 모두 좌파의 분열과 악화, 우파의 회복과 재집권으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싸우며 개혁 염원 대중의 표도 받으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지지를 받으려는 분명한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집권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에 유리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 연금 개악, 부자 감세, 금투세 완화 따위를 제안하며 ‘국민 통합’과 정치 안정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8월 21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중심(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제안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화의 조건과 경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와 관련해 시사적이다.

복합 다중(특히 지정학적) 위기로 정치 위기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진 오늘날에 박근혜 퇴진 같은 일이 단순히 재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계적인 극우 부상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적인 중도 좌우파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윤석열의 집권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고, 지금 윤석열의 극우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민주당 지지로 급속히 쏠리지 않는 배경이다.

따라서 윤석열 극우 본색에 맞서려면 자유주의적 중도파와 전략적 동맹을 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벌이는 여러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켜 전 계급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절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김문성

의료 공백 책임 전가 반대, 생계비 보상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당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61개 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8월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61개 병원에는 한양대학교병원 등 사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두루 포함된다.

8월 19~23일에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해당 병원 조합원 2만 9705명 중 2만 2101명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병원 적자와 의료 공백의 부담을 병원 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과 총액 대비 임금 6.4퍼센트 인상 등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 사용자들은 전공의들이 하던 일을 다른 노동자들더러 대신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정작 필요한 법·제도 정비나 교육,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환자가 줄었다며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 희망 퇴직, 부서 이동을 강요하고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출근 당일이나 전날 쉬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팬데믹 이전에도 악명이 높았지만 팬데믹 중에도,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전공의 공백까지 메우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는 지난 3월 1만 명 수준에서 7월에는 1만 6000여 명으로 60퍼센트나 늘었는데 신규 인력 채용이 아니라 기존 인력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노동자 개인이 환자·보호자의 불만은 물론이고 사고 책임까지도 온전히 뒤집어 쓰게 될 판이다. 정부 지침에 따랐는지라도 실제로 문제가 될 경



응급실 대란 등 의료 위기의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있다

우 병원이나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윤석열은 지난해 PA간호사 업무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에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거의 같은 내용의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등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어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엮힌 데 댈친

한편, 전공의 사직 이후 대형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은 정부와 그 지원을 받아 온 사용자들은 정작 임금 인상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친정부 언론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임금 인상 요구는 비난한다.

그러나 물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노동강도 강화를 보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팬데믹에 이어 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워 온 노동자들에게 '헌신' 운운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시적 야간 근무와 긴급·응급 상황으로 인한 연장 근무

가 불가피한 병원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둔 채 필수요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필수 중의 필수 기능을 수행해 온 공공병원을 사실상 사멸해 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공공병원들은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며 나머지 진료 업무가 대폭 축소됐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려면 단지 적자를 보전해 줄 뿐 아니라 의료진을 새로 고용하고 병원 장비와 시설 등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로도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팬데믹 시기에 이들 공공병원에 지원되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많은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진료를 회복하지 못하며 적자가 누적돼 임금 체불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크다.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기능이 확연히 악화되고 있는 지금 다른 병원 노동자들까지 일손을 놓는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간

호사 등 처우 개선과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뒤늦게 노동자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만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다.

이는 운동에 대한 제어 능력이 민주당에 있음을 사용자들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자체 효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현재 의료 위기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와 병원 사용자들에게 있다. 의료 인력 확충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임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병원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투쟁의 대의에 대한 지지도 비교적 광범하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압적으로 파업을 비난하지는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데믹 하에서 또, 윤석열이 강경한 태도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던 지난해에도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 지지를 받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 지금, 병원 노동자들이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서길 바란다.

장호중

용어설명

PA간호사

병원 사용자들은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간호사들에게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떠맡겨 인간비를 절약해 왔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을 뜻한다. 현행 법상 불법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라,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추가 입법과 관계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파시즘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파시스트 운동을 박살 내려면 그들의 뿌리와 현대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마크 L 토머스**가 설명한다. 이 기사는 그가 2024년 7월 했던 강연을 편집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1930년대와 어느 때보다 더 비슷한 시대에 있다. 그러나 나는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1930년대는 그저 파시즘과 전쟁, 인종학살로 거침없이 진군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 시기는 또한 거대한 노동계급 저항의 순간들로 점철된 시기이기도 했다.

다시금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반동과 저항, 혁명과 반혁명이 공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운명은 역사의 재앙을 그저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지 말지는 전혀 결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파시즘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이 있다.

파시즘의 가장 발달된 형태이자 파시즘이 가장 야만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독일 나치즘이었다.

그런데 나치당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하나는 단순히 그 당을 독일 지배계급의 직접적 창조물로 보는 것이다. 나치당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당이었는데, 바로 대중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당이었기 때문이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국가는 단지 전통적인 군사독재나 경찰 국가가 아니었다. 나치에게는, 자신의 적들을 겨누는 “공성 망치”라고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묘사한 거대한 대중운동이 있었다.



국우의 준동을 막으려면 국가에 기대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된 운동으로 맞서야 한다. 8월 10일 영국의 국우·인종차별 반대 행진

파시즘은 노동계급 조직과 노동조합, 좌파를 강그리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반(反)혁명적 대중운동이다.

반동적 대중운동

그렇다면 21세기의 파시스트는 어떠한가?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들은 선거적 돌파구를 열었다. 나치 분파가 핵심에 있고, 성장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5~16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는 1930년 히틀러의 득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몇 주 전 총선 1차 투표에서 얻은 33퍼센트는 1932년 히틀러의 득표율과 아주 비슷하다.

영국에서는 파시스트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파시스트들에게 이런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아 준 것은 바로 중도, 권력 핵심부, 자유주의 세력들, 보수주의 세력들이었다. 솔직히 말해 때때로 사회민주주의 세력도 그랬다.

그들은 극렬한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고 국경을 요새화했다. 지금 보다시피 그들은 권위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고, 경찰의 권한을 키우고, 시위 탄압을 강화하고,

경찰 폭력을 키웠다. 이 모든 것이 파시스트들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낸다.

예컨대, 2018년 독일에서는 기독교 사회연합(CSU) 출신의 내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가 “이슬람은 독일에 발붙일 곳 없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독일을 위한 대안’의 슬로건이 됐다. 그러나 그 전에 공론의 장에서 이슬람 혐오를 대대적으로 부추긴 것은 기성 보수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우는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은 바로 우리다” 하고 주장한 것이다.

프랑스의 파시스트들은 대통령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이슬람 혐오에 저항하는 무슬림 단체들을 불법화하고, 경찰의 실탄 사용을 고무하는 등의 상황을 이용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두 가면을 쓴다. 첫 번째는 정상성이라는 가면이다.

히틀러의 운동이 특정 시점에 그랬던 것처럼, 파시스트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한 정상적인 세력인 양 행세하며 자신들의 반(反)민주적 의제를 감추는 데 능하다. 그들은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목표를 숨긴다.

마린 르펜(왼쪽 사진)과 국민연합이 하는 말을 보라. 그들은 “탈악마화”를

논한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한 정상적 세력으로 비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종적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어느 정도 감추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가의 이슬람 혐오 정책은 그들에게 신이 준 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르펜은 홀로코스트를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프랑스 국가가 홀로코스트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짓이다. 프랑스 국가는 프랑스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데 철저히 공모했다. 르펜의 주장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을 몰타기한 버전일 뿐이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홀로코스트를 범죄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멜로니는 이탈리아 국가가 거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거짓이다. 이런 주장으로 멜로니는 파시즘 지지자들에게 은밀하게 본색을 드러낸다.

파시스트들이 쓰는 더 본질적인 두 번째 가면은 자신들의 반혁명적 운동을 혁명적 운동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강령과 일부 연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재벌, 대기업, 심지어 거대 금융 자본 등에 대한 반대를 말한다.

이렇게 체제와 권력자들을 향한 분

노를 내세우기 때문에 파시스트들은 전통적 보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에 접근할 수 있다. 기성 보수는 체제를 더 유능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파시스트들은 체제를 박살 내겠다고 말한다.

파시스트들은 체제에 대한 분노와 자본주의 사회의 긴장을 ‘국제적 위협’을 겨냥하도록 비튼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건전한 자국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제 세력’들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수순은 ‘국제 세력’을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개의 가면

이렇듯 파시스트들은 체제에 반대하는 듯한 언사를 하고 심지어는 반자본주의적인 듯한 용어를 쓰는데, 특히 “세계화”를 비난할 때 그렇다.

좌파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에 반대한다. 반면 파시스트들은 자본 대 노동, 노동자 대 사용자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 대 ‘국제 세력’의 대립에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다.

파시스트들은 몇몇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 자본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헝가리게 유대인이자 금융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거의 모든 파시스트들이 거론하는 대상이다.

르펜은 드러내 놓고 유대인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당이 반대한다고 르펜이 열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시스트들은 이중성과, 그럴싸한 부인의 여지를 남겨 두는 전략을 취한다. 즉, 발뺌할 여지를 남겨 두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은밀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치 거리 폭력배들은 비록 1930년대 독일의 나치 폭력배들에 비하면 훨씬 약하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분명 있다. 그들은 르펜 같은 자들의 극우적 언사에서 더 자신감을 얻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극우가 파시스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전히 돌격대나 거리 강패를

오늘날 파시스트들은 이슬람 혐오를 이용한다. 7월 영국 극우·파시스트의 폭동 사태도 이슬람 혐오가 주 요인이었다

필요로 할까? 경찰 같은 국가의 물리적 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조르당 바르텔라나 르펜 같은 자가 경찰을 거느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도 안이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 계급을 패배시켜서 완전히 원자화시키고 어떠한 저항의 가능성도 차단하려면, 파시스트들에게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투철한 거리 돌격대의 집단적 폭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시스트들이 국가를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를 통해 파시스트들이 기반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지 총리를 배출한, 사회에서 용인될 만한 정상적 세력으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국가를 더 권위주의적인 노선에 따라 개조하면서 파시스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의 득표가 아주 작은 강성 파시스트 중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중핵은 우려스럽게 커지긴 했지만 아직 193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인 파시스트 반대 압력에 취약하다.



파시즘의 목표는 노동계급 조직들을 파괴하고 민주적 권리들을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여섯 가지 중요한 전략적 과제 내지 필수적 고려 사항들이 있다.

여섯 가지 과제

먼저, 파시스트들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겨 내야 한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NF)의 지도자 존 틴들이 설칠 때에는, 그가 히틀러 시절 제복을 입고 있는 1960년대 사진을 찾아내 그의 가면을 벗겨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파시스트들은 그때보다 더 영리하다. 그들은 파시즘과의 연

관성을 추적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언어를 해독해야 한다.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 청년 그룹 내부에서는 노골적인 파시즘과 나치 찬양 언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런 폭로들을 이용해 이들이 정상적인 당이 아님을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둘째, 그들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면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파시스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들이 33퍼센트를 득표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출연을

▶ 10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그리스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은 경제 위기를 이용해 부상했으나, 혁명가들이 광범한 세력과 함께하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으로 크게 위축됐다

▶ 9면에서 이어짐

막는 것은 꽤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출현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는 것에서 출발해 볼 수 있다.

또, 파시스트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관공서를 대관해 선거 집회를 벌인다면, 단지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행사를 실제로 저지하려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항은 자유주의적 중도와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중도가 차악이라는 믿음 하에 그들과 선거 연합을 맺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적 중도는 파시스트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자주 주도적 구실을 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지배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들에게도 차악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계급에게는 좌파가 진정한 적이기에 파시스트들이 차악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결국에는 파시스트들과 거래하려 할 것이다.

1932년 독일 대선에서 사회민주당은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고 힌덴부르크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힌덴부르크는 제1차세계대전 동안 독일을 지배한 과두의 한 명이었다.

사회민주당은 히틀러를 막기 위해 힌덴부르크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힌덴부르크는 7개월 뒤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파시스트들에 맞서려면 국가나 자유주의적 중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선거에서 수백만 표를 얻었다 해도, 거리에서는 우리가 다수임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기후 파업',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프랑스에서 일어난 연금 개악 반대 파업을 떠올려 보라. 많은 나라에서 좌파는 우파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중을 여러 번 동원할 수 있었다.

전략적 과제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파시즘을 직접 겨냥한 운동을 건설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파시스트 조직을 직접 겨냥하여 단단한 파시스트 중핵을 더 폭넓은 연성 지지자들로부터 분리시켜 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 사활적이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파시스트 조직을 깨부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선거나 의회에 활동의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할 책무가 크다.

우리의 전문 분야는 아래로부터 운동과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의 구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섯 번째 고려 사항은 '경제주의적' 접근으로는 파시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파시스트들의 정책이 우파적이고 그들이 실은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파시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경제적 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는 파시즘을 물리칠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파시즘을 저지하기 위한 혁명가들의 핵심 전술인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수 없다.

인종차별이 하는 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인종차별은 파시스트들을 묶어주는 핵심 기제의 하나다. 우리가 말뿐 아니라 실천에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공동체들의 신뢰를 얻어 더 강력한 저항을 건설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은 대중적인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을 건설했다. 그 운동의 인상적인 점은 매번 새로운 파키스탄계 공동체가 참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자본주의 좌파, 특히 SEK 활동가들이 파키스탄 공동체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속한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영국의 많은 도시에서 일부 무슬림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편에서 행동한 덕분에

다. 그들에게 파시스트에 맞선 집회에 오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만큼 그들을 방어하는 운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 좌파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마지막으로, 혁명가들만으로는 파시즘에 맞선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일관된 반자본주의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는 데서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폭넓은 좌파와 노동조합 운동과 동맹을 맺으려 부단히 시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공동전선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행동에서의 단결이다. 즉, 파시스트들의 본색을 폭로하고, 공론의 장에서 파시스트들을 몰아내고, 파시스트 조직을 압박하여 분쇄하기 위한 대중행동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 11면으로 이어짐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6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가?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1949년 중국 혁명으로 탄생한 사회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75년 전의 그 혁명은 서방 제국주의에 큰 타격을 줬다.

19세기부터 유럽 강대국들은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은 모두 중국에 “조차지”가 있었다.

그중에는 홍콩과 같은 주요 항구도 있었다. 홍콩은 1841년 영국이 중국에서 아편을 팔 권리를 지키겠다고 벌인 전쟁의 결과로 영국으로 넘어갔다.

평범한 중국인들에게 1949년 혁명 이전의 중국 상황은 야만이였다. 평균 기대 수명은 40대 중반에 불과했다. 많은 여성들이 노비로 사고팔렸다. 소위 매력에 관한 것이라며 여성의 발을 꼬꼬 싸매는 전족이라는 관습은 당시 여성들이 받는 억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중국에서는 경쟁 군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이들을 타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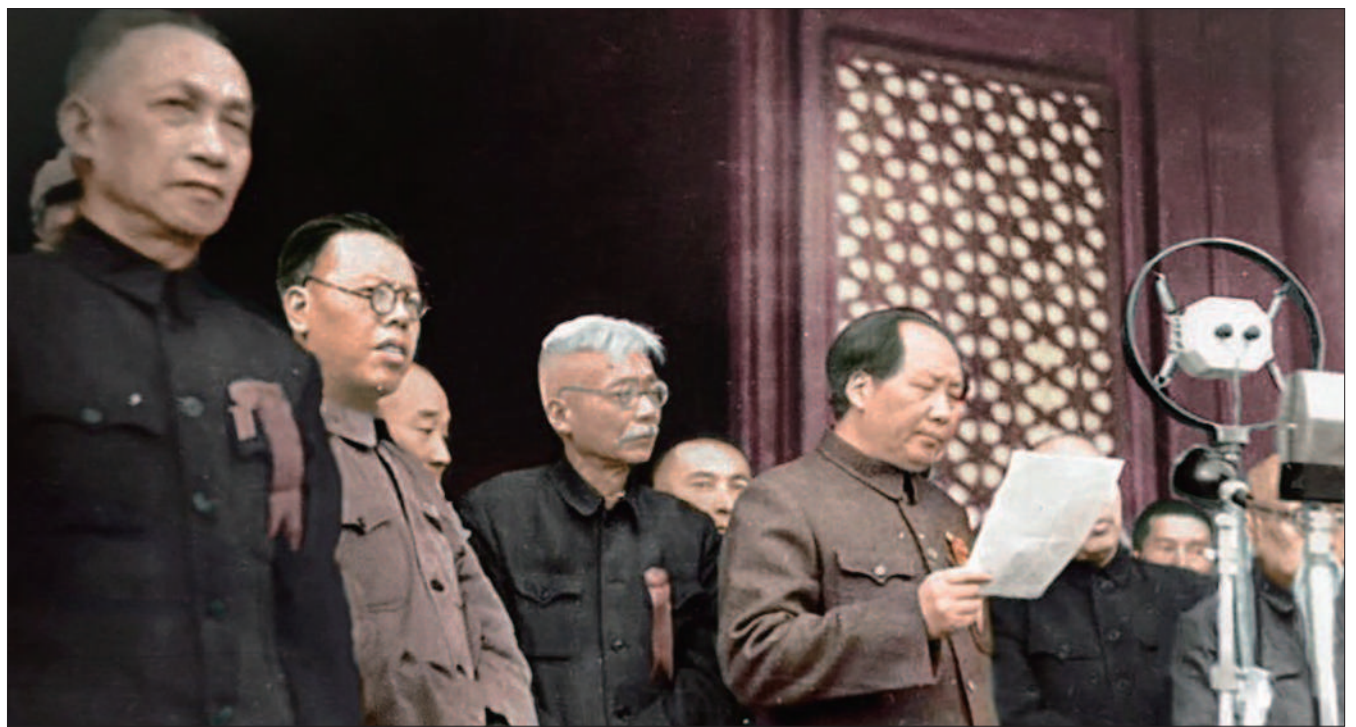
1950년대에는 평범한 중국인 다수의 삶이 개선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아 재분배했다. 1952년 혼인법으로 여성들은 더는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고 사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해방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베이징에 입성할 때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서서 그들에게 환호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혁명에서 어



1949년 혁명은 위대한 민족 해방 혁명이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다

떠난 능동적 구실도 하지 않았다. 그 혁명으로 들어선 지배 체제 또한 어떤 면에서도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농민들이 농촌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마오쩌둥이 승리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1927년부터 기나긴 내전이 이어졌다. 공산당은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의 장제스가 통치하는 중화민국과 싸웠다.

1937년부터 두 세력은 일본에 맞서 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중국의 북부와 동부 해안의 많은 부분을 점령했다. 공산당은 게릴라전으로 전과를 올리면서 세를 키웠다.

공산당은 농민 사이에서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농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경작한 것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이 장악한 해방구에서 진정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전쟁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큰 세력들이 그 전쟁에 관여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 소련과 손잡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막대한 돈과 무기를 국민당 정부에 지원했다. 그러나 그 지원은 국민당과 정부 관료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고, 그러면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농민의 지지를 계속 얻었다. 1945년 소련은 일본에게서 빼앗은 중국 북부를 중국 공산당에 넘겼다. 그 덕분에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농촌 지역이 더 늘어났다.

국민당 세력은 1950년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버텼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

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화 인민공화국을 선포(위 사진)한 시점에 대부분 분쇄됐다.

국민당은 타이완섬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 초에 마오쩌둥을 비롯한 소수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창당한 정당이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작지만 강력한 노동계급이 혁명적 변화를 관철시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1925년에는 중국의 도시들에서 노동자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한 뒤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받아들였다. 다음 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뒤 벌어진 일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여섯 번째 글이다(QR코드로 전체 연재 보기).



▶ 10면에서 이어짐

영국에서는 파시스트들과 맞서 싸운 매우 풍부한 경험이 있다. 1970년대에 영국의 국민전선은 제3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1990년대에는 영국 국민당(BNP)이 약 50명의 시의원을 배출하고 100만 표를 받았다. 2010년대에는 잉글랜드 수호 동맹(EuDL)이 거리에서 활개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파시스트 조직들을 물리쳤다.

어떻게 그랬을까? 혁명가들, 바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공동전선의 전통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전략과 관련해 좌파와 더 광범한 노동조합 운동과의 논쟁에서 거듭 승리를 거뒀다.

그 결과 우리는 거듭 파시스트들을 박살 냈다. 왜냐하면 파시스트들이 결코 세력을 규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극적이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합과 그 전신인

국민전선이 40년 동안 프랑스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다.

우리는 이런 점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이러한 전통에 기반하여 이전에도 그들을 격파해 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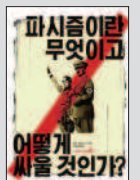
출처 Mark L Thomas, 'What is fascism — and how should we fight it?' (2024. 8. 11) / 번역 전문기·김종환

📖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노동자연대, 74쪽, 3,000원

※ 구입: 02-2271-2395, wsorg@ws.or.kr



더 읽을거리

본지 기사, 유럽 혁명적 좌파
방한 강연, 추천 도서 등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6일 한국에 왔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사회주의전진)이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필자 정은희)라는 글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은 이 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정주 가사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을 조직해야 할 대상이자 투쟁의 주체다.”

“아무리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도 정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 간 경쟁을 용인하는 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잇속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빠져들게 된다. ... 한국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를 환대하고 단결하며,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현실화해야 할 때다.”

사회주의전진의 이번 입장이 혁명적 국제주의자들에게 반가운 것은,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 유입 규모와 업종을 확대하자 진보 정당과 노동조합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 그 부문의 임금이 떨어지고 내국인 고용이 줄어든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전진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반대해 온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다. 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대하자는 이번 글의 입장과 모순되는 행동이다.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가사·돌봄 부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가 해당 일자리의 임금이 낮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의 질 개선을 주장한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을 열악한 처우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언뜻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기 전에 먼저 내국인의 유입을 유도하라는, 즉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라는 주장(때로 암시적이다)이 담겨 있다.



기대와 절박함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교육받으며 사용한 명찰

예컨대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8월 12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다. “인력 부족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 논의는 없이 무조건 외국인력을 싸게 들여와야 한다[는] ... 정책의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는 이주노동자 유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보수적 요구에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라는 진보적 포장지를 씌운 것이다.

모호함

그러나 사회주의전진이 이번 글에서 썼듯이,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이주 가사노동자를 송출하는 저개발국가에서, 이주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 속에서 아이를 먹이기 위해, 아픈 가족 구성원을 위해,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주한다.

그래서 본지가 지적했듯이, 한국행을 막으면 이들은 자국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거나 한국보다 노동조건이 더 나쁜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전진이 아무리 이주노동자를 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든,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다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단결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전진이 이주노동자 환대 입장과 모순된 실천을 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올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2일, 사회주의전진 울산지역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울산 동구 노동당 이장우 후보에 대한 지지와 계급투표를 제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 울산지역위원회가 이장우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이장우 후보가 조선산업 국유화, 노동자의 산업통제 투쟁 촉구 등에 미치지 못하는 공약을 내놨다며 그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밝혔다.(이 요구들은 사회주의전진이 내놓은 ‘대중투쟁강령’에 포함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장우 후보가 이주노동자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펴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장우 후보는 1월 11일 ‘조선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와 HD현대, 이주노동자 확대 중단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기자회견을 했다. 또, 1월 15~27일 현대중공업 출입문에서 “비숙련 이주노동자 확대는 저임금 고착! 인력난 해법은 임금인상”이라는 문안의 팻말을 들고 출퇴근 인사 선거운동을 했다.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리지 말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물론 좌파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그 후보의 선거공약 전체를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후보가 노동계급의 단결을 저해하는 공약을 내놓았다면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삼가서도 안 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돼 있

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선거 운동을 한 후보를 지지하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사회주의전진은 ‘대중투쟁강령’에서 특별히 건설업과 조선업을 지목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 요구가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이 계급단결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음을 상기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정의당 등등 좌파 후보 지지를 주장하는 맥락에서 이장우 후보도 지지했지만, 이장우 후보가 이주노동자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었던 것은 비판한 바 있다.(본지 기사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를 보시오.)

조선업은 최근 이주노동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의 하나다. 그런데 조선업 노동자들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타협하는 이장우 후보의 입장을 비판하지 않고 투표를 호소하는 것은 사회주의전진이 이주노동자 환영 입장을 진정 실천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시스트들이 이주민 배척을 전면에 내세우며 활개를 치고 있고 중도 좌파들이 이주민 배척에 영합하거나 침묵하는 상황에서, 좌파가 이주민을 방어하고 나서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해졌다.

급진 좌파가 소속 연대체와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이 연대체의 핵심 요구 자체에 관련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타협이 아니라) 배신적인 타협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전진은 쿼어퍼레이드 주최 측에 핑크 워싱 제국주의/시온주의 국가의 대사관들을 배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적 있다. 이는 노동자연대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이다. 우리는 핑크 워싱 국가와 대기업들이 쿼퍼에 참가하는 것을 비판한 적은 있어도 그들의 배제를 주최자들에게 요구한 적은 없다. (우리는 참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런 짝어내기 요구는 과도하다고 본다.)

이처럼, 성소수자와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임준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추가 10년은 유상 임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LH의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액)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애초 정부는 “월세 낭비” 운운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난 2년 여간 피해자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많은 피해자가 손해를 떠안으며 각자도생해야 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서 피해자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안을 5월에 내놓았는데, 4월 총선 패배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표출된 상황에서 불만을 달래기 위한 양보 조치로 제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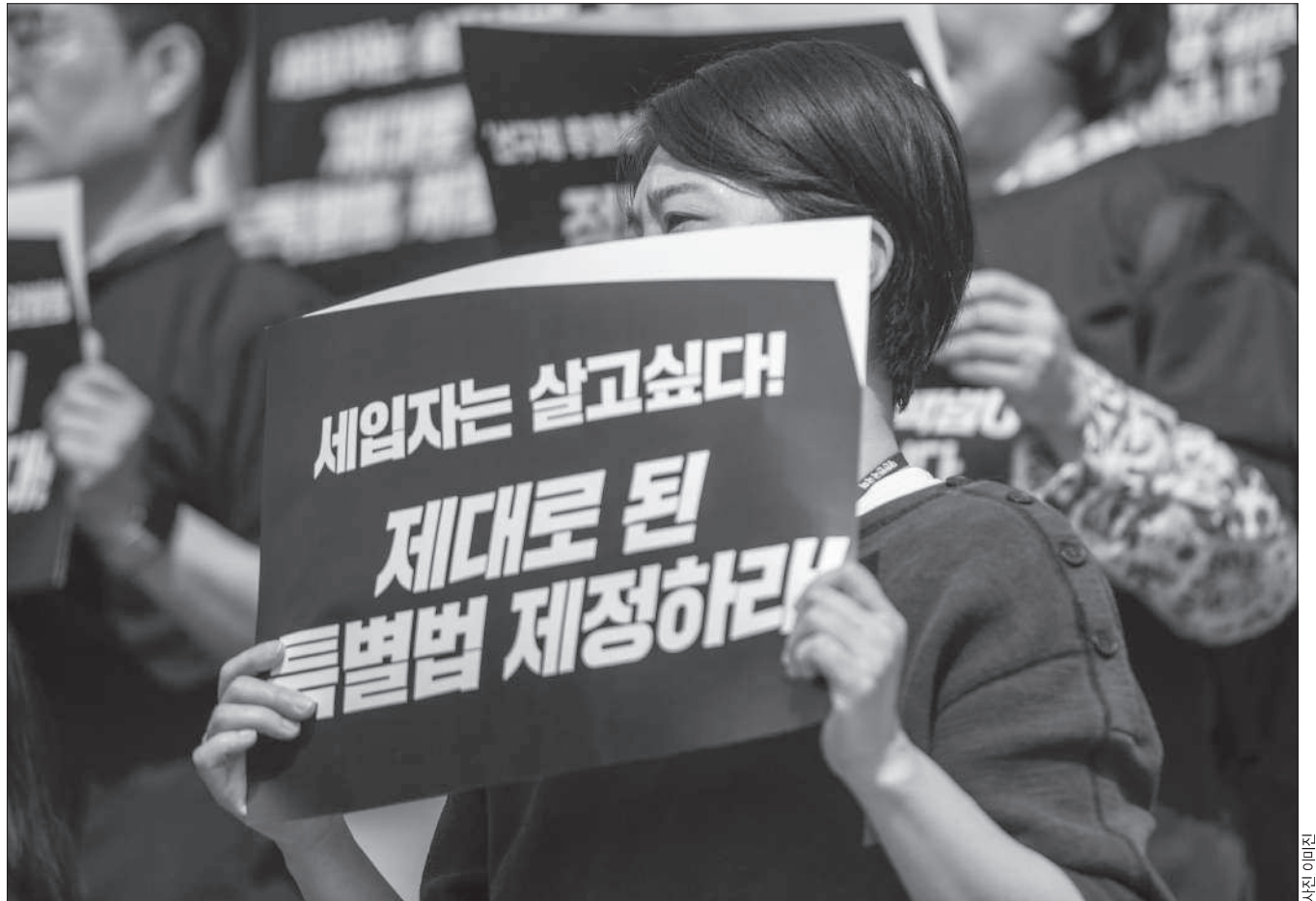
그럼에도 실제 피해 구제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많다. 또, 피해자 구제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장선훈 위원장은 이번 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 최선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 하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전 대책위가 자체 추산해 본 결과, 낙관적으로 잡아도 후순위 피해자(대전 지역은 압도다수가 다가구 피해자)의 경우 “피해 보증금의 20퍼센트가량을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80퍼센트는 날린다는 의미다.

20퍼센트

그러는 동안 집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선순위 은행들은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으며 경매 배당을 받을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은행들이 배당 받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만 뺀다 하더라도 피해 변제율은 20퍼센트가 아닌 30퍼센트 이상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죄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떠



정부의 미온적 대처 속에 지난 2년간 피해자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무상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일 텐데,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일단 공공임대 주택의 컨디션이 솔직히 북북북이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컨디션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낮다면 분명히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좋은 컨디션의 공공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에 결혼해서 세대수가 두세 명 늘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원하는 공공임대 지원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20~30대 청년인 만큼 10년 공공임대 무상 거주가 보장되려면 원룸 수준의 주택이 아니라 더 나은 공공임대 주택 제공이 필수적이다.

개정안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난 2년여간 이미 상당수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거나 큰 손해를 보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 권네트워크가 피해자 실태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중 7퍼센트가 경매가 끝난 상황이었고, 63퍼센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당시 조사로부터 거의 1년이 됐으니 경매가 완료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상당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주택 최소 54채가 낙찰됐다.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각지대

또,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 받을 수 없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5퍼센트가량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모호한 측면이 많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LH의 감정가와 낙찰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피해자들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 측은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이라고 답할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LH가 피해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매입할지도 물음표다.

만약 경매 절차를 통하지 않고 LH가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장 원리 내에서 정부 지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안도 시장 가격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 잃게 된 피해자에게 30퍼센트의 최소 보장을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말이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2년간 합의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5년간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8월 초에 정부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22조 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너무 뒤늦고, 여전히 부족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크게 대조된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의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QR코드로 전체 보기).



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시켰고, 임금 체불과 욕설, 폭행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명동성당 농성에서 내건 노동자들의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때리지 마세요

미얀마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D 씨가 사무실로 찾아온 건 평일 아침이었다. 문 열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그에게 들은 얘기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출근하자마자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들이 보는 앞에서 D 씨의 목덜미를 여러 번 잡아채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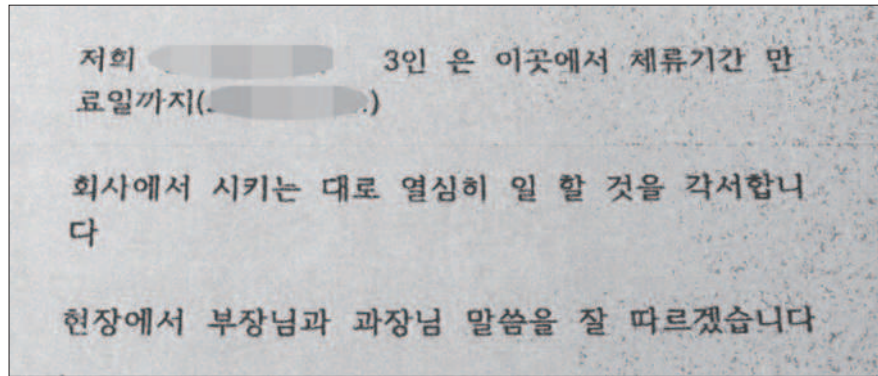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당시 폭행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자필 서명이 담긴 진술서를 써 줬다.(아래 사진)

사용자의 이주노동자 폭행 건은 나도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했다. 먼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며 돌아갔다. 도대체 왜 출동한 것인지.

폭행 건에 대응하려고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의사는 D 씨의 어깨, 팔, 팔꿈치에 타박상이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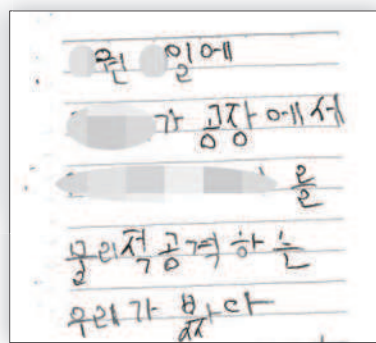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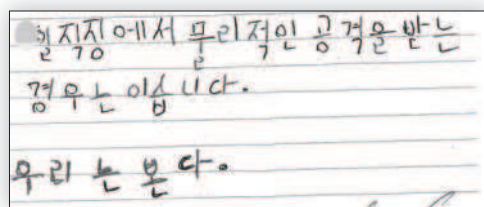
회사에 돌아갈 수 없었던 D 씨는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 그와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밥그릇에 고개를 묻고 허겁지겁 순식간에 밥을 해치웠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는 그가 혹시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출근하자마자 폭행당해 회사를 나온 그에게 첫 끼였는데, 매우 허기졌던 모양이다. 어쩌면 밥보다 자신을 걱정해 주는 따뜻한 인간적 대접이 더 고맙을 수도 있다.

고용지청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하려고 관할 경



(위 사진) 사용자가 서명을 강요한 각서

(아래 사진) 폭행당한 노동자의 동료들이 쓴 자필 진술서



찰서에 함께 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폭행 금지 조항 위반이지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는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리권이 없지만 D 씨 혼자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말도 안 통하는데다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인 내가 함께 가서 고소하려 했지만, 형사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이므로 고용지청에 신고하라며 등을 떠밀려 했다. 고소장 접수조차 목소리를 높이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일이었다. 최초 출동했던 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형사나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D 씨에게서 들은 사업장 얘기는 기가 막혔다. 그에 따르면 해당 사용자는 상습 폭행범이었다. 다른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도 폭행을 당했고, 더 어이 없는 것은 그 사용자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이주노동자에게 입국 비용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사용자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자였다.

경찰 고소와 고용지청 신고에 압박을 받았는지 사용자는 대리인인 나에게 고소와 신고를 취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적반하장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 줄 테니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 자는 술에 취한 듯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한국인 노무사에게도 이렇진대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됐다. 지금까지 만난 사용자 중에 최악의 “진상”이었다. 게다가 D 씨는 폭행 사건 이후 두려움 때문에 사업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용자는 계속 안 들어오면 이 탈신고를 하겠다고 D 씨에게 협박도 했다.

D 씨도 나를 결심하고 사용자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밀고 나갔다. 결국 미지급 연차수당, 임금 등도 받아 내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 사업장에서는 최초의 일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쁘지가 않았다. 저런 진상들이 폭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돈까지 뜯어낼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적인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 걸린 팻말처럼, “때리지 마라”,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강제 근로와 ‘출근 투쟁’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제 근로가 이직 금지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미 고용허가제 자체에 강제 근로가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더 확실하게 하려

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풍문처럼 돌았다. 그런 각서를 강요받은 노동자들이 나에게 왔다.

이들은 M, S, T 씨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사업장에서 꽤나 고통을 받았을 텐데도 상담하러 왔을 때는 얼굴들이 너무나 밝아 기억에 선명하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다행히 한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어 이들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용자는 이직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자 일을 시키지 않고 기숙사로 돌려보냈다.(위 사진)

사용자가 이런 각서를 대놓고 요구하는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상담을 거치고 이들은 20일 동안 ‘출근 투쟁’을 벌였다. 사용자의 각서 강요 장면과 일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을 20일에 걸쳐 품에 쥔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런 상황을 사업장에서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한편에서 안심한 것은 이들이 혼자가 아니란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20일의 ‘출근 투쟁’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곧바로 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 금지 규정 위반과 휴업수당(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다. 20일간 ‘출근 투쟁’의 기록은 각서 사진과 함께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됐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처벌이 강한 강제 근로 금지 위반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제출로 사용자는 백기 투항했다. 이 순간은 매우 통쾌했다. 사용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밝은 얼굴로 찾아왔다.

강제 근로 강요도 쟁점이지만 함께 뭉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

이들의 해맑고 낙관에 찬 표정에서, 차별을 묵과하지 않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읽었다. 고마운 M과 S와 T.

24년 전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이주노동자들의 표정이 이들처럼 밝았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어깨를 걸었던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의 또다시 극우화와 발맞춰 반낙태 운동 재가동하는 보수파들

전주현

보수파들이 다시 임신중지(낙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일과 맥을 같이한다. 경찰은 해당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이들을 모두 출국 금지시켰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36주 낙태’ 사건을 규탄하며 “태아 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트럭’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임신중지 반대 홍보전에도 돌입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낙태로부터 태아를 지키는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8월 22일부터 4주간 ‘생명포럼’을 주관한다.

보수적 의사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만삭 낙태는 살인”이라며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보수파들은 이번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 규제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

우파 정당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미 임신중지 규제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은 이른 시일 내에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배숙은 차별반대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권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5선 의원으로, 보수 복음주의 정치인들과 법률가들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8월 28일 조배숙은 같은 당 의원 조정훈 의원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와 함께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전에 낸 법안을 볼 때 이들은 임신 초기(임신 6주 또는 10주 이내) 임신중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낙태죄’를 유지하는 안을 발의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자기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다.” 2017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되면 여성들의 고통과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임신중지 반대자 등 보수 세력은 (잠정적) 패배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우파 견제 정서와 임신중지권 지지 여론에 부딪혀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성장하고 임신중지권 공격이 벌어지면서 한국 보수·우파와 임신중지 반대 세력도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다시 극우 본색을 드러내면서 후기 임신중지 공격에 나서자, 우파들은 임신중지를 대폭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고 여기는 듯하다.

정부도 “[임신중지] 관련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6주 낙태’ 사건을 경찰에 의뢰한 직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번 후기 임신중지 공격이 어느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는지 임신중지 찬반 진영의 동향을 살피며 임신중지 규제 수준과 추진 방법 등을 고민하는 듯하다.

보수·우파들의 운동이 활성화되면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임신중지 공격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36주 낙태’ 사건 이후 경찰은 이미 공격을 확대해 임신중절약(미프진)의 “불법 유통”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미프진 유통 웹사이트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약의 가격만 올리고 가짜 약을 부추겨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을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거짓과 위선

보수·우파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데마고기일 뿐 아니라 위선이다. 그들은 “생명 경시 풍조”를 가장 앞장서서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비난하지 않는다. 심지어 개신교 우파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태아 생명권’에 대한 임신중지 반대 세력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 그들은 1970~80년대 한국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피임과 임신중지를 권장했을 때, 이를 묵인하거나 때로는 산아제한 캠페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들이 임신중지를 공격하는 진정한 목적은 “태아 보호”가 아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성적 보수주의를 옹호하고 노동계급을 내부적으로 이간하려는 데 있다.

보수·우파는 가난과 실업, 복지 삭감에 맞선 유일한 방패는 가족뿐이라고 선전하며, 임신중지와 동성애가 가족 위기와 삶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선전을 통해 지배계급과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 임신중지 공격을 고리로 한 보수·우파의 태아 생명권 담론에 맞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고히 옹호해야 한다.

임신중지권 옹호에 일관되지 않은 민주당

수년째 임신중지권을 사실상 외면해 온 민주당은 ‘36주 낙태’ 논란에 대해 여태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민주당 자체는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옹호한 바가 없다. 몇몇 소속 의원들이 임신중지권 보장 법안을 낸 적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자당의 외면 앞에 무기력했다. 지난 국회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과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법안을 낸 권인숙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출신)이 각각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신중지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도 ‘36주 낙태’ 논란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주민·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임신중지 제약과 타협할 여지를 남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못 믿을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에 계속 숨통을 틔워 주고, 노동자 등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개선은 외면해 왔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은 정부·여당에 타협하고 부유층을 위해 거둬 후퇴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을 활용해 보수·우파의 임신중단 반대 움직임을 물리칠 수 없는 이유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임신중지를 부정하는 법적 제약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후기 임신중지를 포함해 조건 없이 모든 임신중지를 합법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재정 지원 등으로 임신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진 출처: DivideWork 영상 캡처

8월 22일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의 행진 새 학기 투쟁을 시작하자

팔레스타인 연대 새 학기 캠퍼스 행동을 시작한 미국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행동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들은 방학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가해 왔고, 일부는 대학 당국과 재판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앞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많은 대학생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탄압과 소송에 굴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깃발을 챙겨 캠퍼스로 돌아오고 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9월에 미국의 새내기들은 쿠퍼예를 두른 선배들을 만날 것이다.

8월 22일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지지하는 학생들(SJP)'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C) 지부는 지난 학기 천막 농성장을 차렸던 사우스빌딩 앞에서 이번 학기 첫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 참가한 SJP 회원이자 대학원생인 제이컵 진은 이렇게 말했다.

“대학 당국이 우리 요구[이스라엘 투자 철회]를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운동을 계속키울 것입니다.”

진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어떤 사람들은 차액해리스에 투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트럼프와 해리스] 둘 다 악입니다.”

8월 23일에는 SJP 조지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이 새 학기 투쟁 선포식을 하고 ‘쇼하다 광장’(순교자들의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쇼하다 광장은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들이 조지워싱턴대학교의 캠퍼스 광장에 새로 붙인 이름이다.)

캠퍼스로 돌아오다

쇼하다 광장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렇게 외쳤다. “[학교 당국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떠나게 강제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쇼하다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팔레스타인의 형제자매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학생들은 8월 17일에 팔레스타인 연대 학생 박담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운동을 돌아보고 새 학기 활동 계획을 토론했다. 이어서 이번 주를 팔레스타인 연대 주간으로 정하고 이번 주 내내 캠퍼스에서 쿠퍼예를 착용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SJP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학생들은 ‘가자지구에는 돌아갈 학교가 없다’ 하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표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교육 기관 파괴를 규탄했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

아오는 동안, 62만 5000명이 넘는 가자지구 학생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모든 대학이 폐허로 변했고, 학생과 교육자 수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교육 기관 파괴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계산된 행위입니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운동의 봉화를 올렸던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은 8월 27일 뉴욕 사쿠라파크에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팔레스타인 101’ 강연회를 개최한다.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은 8월 27일부터 30일을 ‘해방 오리엔테이션’ 주간으로 정해 토론회와 영화 상영회 등 각종 행사를 연다.

지난 학기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큰 힘이 됐다. 가자지구 피란민들은 난민촌 텐트에 미국 대학생들의 연대에 고마움을 표하는 글귀를 썼다.

반면, 이스라엘과 그 협력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다.

“제노사이드 조(인종학살자 바이든)”를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린 데서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큰 몫을 했다. 미국 정치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네타냐후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텐트 농성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학생들의 저항에 밀려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한 대학들도 있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유학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의 피쳐 칼리지는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사전 승인 프로그램 목록에서 삭제해야 했다.

8월 14일에는 컬럼비아대학교 총장 샤피크가 사임했다. 샤피크는 경찰 병력을 불러들여 학생들을 악랄하게 탄압했던 자다. <뉴욕 타임스>는 샤피크의 사임에 대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컬럼비아대학교와 미국 전역의 대학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평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중동 학전 시도가 계속되는 지금, 개강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다시 키운다면 불굴의 저항을 계속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이재혁